

文, IOC 총회 개막식 참석... '평창 외교전' 본격화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남 관심
“핵 문제 평화적 해결 좋은 전기”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방남하는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은 지금까지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자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고위급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에 따라 방남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경우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저녁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IOC 총회 개최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어젯밤(4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접견하는 것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외교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 (왼쪽부터) IDB 앙헬 메히아 아시아 자문관, 모레노 총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늦게 통보받았고,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날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김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모레노 IDB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IOC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일팀 구성을 허용했다”면서 “덕분에 평창올

림픽은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남북 관계개선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도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의 경제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모레노 총재는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와 동계 올림픽 참관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모레노 총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탁월한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이 젊은이들이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면 글로벌한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엔 히스패닉계가 많은 만큼 미국

도 (한국 젊은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레노 총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132차 IOC 총회 개최식’에 참석해 올림픽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숨겨진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총회 개최식에 앞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린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 동계올림픽과 IOC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IOC 위원들을 일일이 소개받으며 따뜻한 환영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뒤이어 치러진 총회 개최식에는 IOC 위원, 국제스포츠연맹(IF) 및 차기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IOC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IOC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총회도 함께 열린다. 또 총회 개최식은 개최국 국가 정상이 참석해 IOC 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것이 관례다.

문 대통령은 개최식 축사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평화를 향한 평창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전 세계가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올림픽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바른정당-국민의당 합쳐 ‘미래당’

통합안 의결... 13일 합당 마무리

바른정당이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다.

바른정당은 통합과 개혁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라는 가치를 앞세워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를 깨는 게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일 통합추진위회의에서 합당 후 당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다.

유 대표는 이날 전대 개최사에서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개혁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과 합리적 중도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낡고 병든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역주의라는 구태를 반드시 극복하고 동서가 화합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제가 안 대표와 약속한 새로운 정치는 개혁적 보수의 뜻과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며, 춤고 어두운 계곡에서 중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전진하겠다”면서 “제가 맨 앞에 서서 이 계곡에 들어섰고, 언젠가 빠져나올 때는 여러분의 맨 뒤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대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정’, ‘합당 수임기구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바른정당에서 정병국 당원대표자회의 의장,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당에서 김관영 사무총장이 축하차 방문했다.

오는 13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대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법적 합당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지난해 1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탈당파가 주축이 돼 구성된 바른정당은 출범 1년여 만에 사라지고 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미래당은 출범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의 목표를 천명하기 위해 각각 호남과 대구 출신인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공동대표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등에 ‘지역화폐’ 도입 필요”

(상품권)

지역화폐 자영업자 지원 방안 논의
기초연금 30% 지역화폐로

올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의 불만이 극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 및 복지수당을 일부 연동해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두루’, ‘성남사랑 상품권’, ‘은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공급해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지역 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기초연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초 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광운 의원(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박광운 의원실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 내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 유발 효과 등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30%를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온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거시경기가 부양되고 국민경제가 순환한다는 로드맵의 출발이 바로 지역 화폐”라며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동 수당 등 사회 임금과 공무원 복지 수당을 지역에서 사용

토록 하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 보호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141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 1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 20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03조원으로 소득창출 효과 39조3000억원,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 88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국회, 경제계 이해도모 상시협력채널 구축

국회가 경제계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상시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제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9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이

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